

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

금융규제 큰 틀 전환 → 자율과 경쟁 제고

2015. 6. 15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금융규제에 대한 현장의 평가	2
III.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방향	4
1. 금융규제의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	5
2.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효과	7
3.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	8
IV. 추진체계·일정	9

I. 추진 배경

- 대통령, '14.2월 "경제혁신 3개년 계획"에서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혁 필요
 - 규제비용총량제 도입, 네거티브 및 효력상실형 일몰 전환,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철폐 등
- 금융위, '14.7월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개혁방안 마련
- 대통령, '15.1월 신년사 간담회에서 내수부진·저성장 극복을 위해 고질적인 규제개혁의 시급성 재강조
 - 규제개혁 방식을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, 사전 규제를 사후 성과기반으로 전환, 규제수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설정
- 금융위, '15.3월 "금융개혁방향"에서 금융권의 자율과 경쟁을 위해 감독관행개선과 함께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추진 발표

①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(Categorize)·합리화, 국제수준에 부합

② 현장의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·행정지도 폐지

③ No Action Letter 등 적극적 사전 유권해석 활성화

④ '전업주의' 틀을 유지하면서 네거티브화 추진

⑤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·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⑥ 내부통제 강화 및 위반시 엄정제재 원칙 확립 병행 등

II. 금융규제에 대한 현장의 평가

- '14.7월 「금융규제 개혁방안」을 통해 현장 중심, 숨은 규제 중점 정비, 규제개혁 상시화 등을 추진
 - * 22개 금융유관기관 TF 구축 등 금융 수요자가 애로사항 발굴
 - * 1,769건(숨은규제 921건) 발굴, 711건(40%, 숨은규제 471건) 개선
 - *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, 금융규제정비의 달(매년 9월) 지정
- 숨은 규제 개선,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
- ① 금융규제 전체에 대한 체계적·종합적 개선(Top-Down)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 및 금융환경 변화의 수용성 제고 필요

- 규제자의 관점에서 개선이 용이한 현장 애로과제를 발굴·개선하는 방식(Bottom-Up) 중심
- 당국에 제안하여 불수용된 과제이지만 선진 사례들과 비교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→ 패자부활 필요

②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현장지도·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통제받지 않는 현장권력을 행사한다고 지적

- 공식절차 없이 실무자가 금융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지도 → 시한과 구속력이 불확실
- 법령상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출시에 제약이 없으나, 사전에 건건이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
- 인·허가의 경우 실무자와의 사전협의 후 동의를 받은 후에만 금융위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는 불만
- 법적요건 외에 실무자 재량으로 요건을 추가하여 접수·검토를 지연
- 사후 신고·보고를 필수 사전협의로 운영하는 형태 등

- ③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하여 금융회사 영업행위, 경영판단 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

- 은행이 보조적 성격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려 했으나, 건전성을 이유로 위탁이 곤란하다고 의견 제시
- 금융당국이 배당자제 권고
- 가격(수수료, 금리), 보수에 대한 제한으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 영업·수익구조가 획일화

- ④ 행정지도 일괄폐지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력이 지속

- '14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당국이 무효로 공표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는 준수 여부를 당국에 문의
-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폐지해도 금융회사는 해당 행정지도를 내규에서 삭제해도 되는지를 당국에 질의하는 실정
→ 금융회사가 폐지된 행정지도를 내규에서 삭제하지 않는 이상 행정지도는 계속 금융회사를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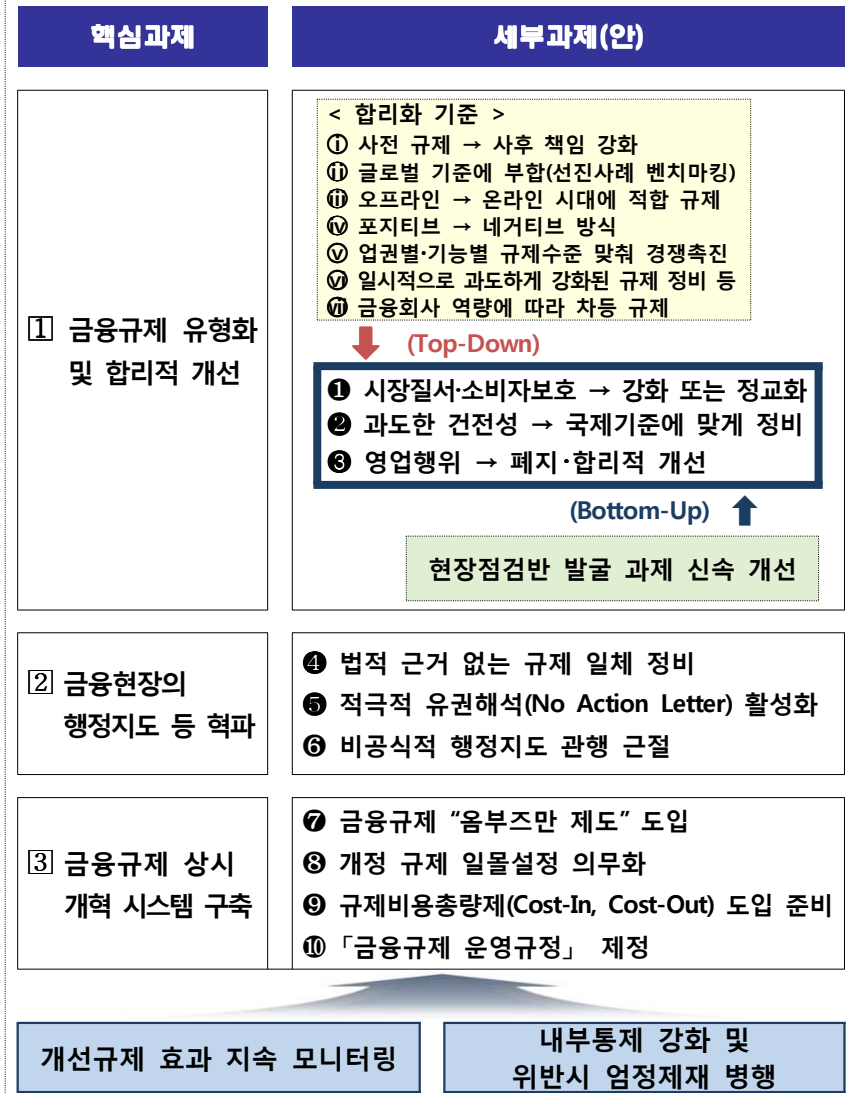
- ⑤ 금융회사 스스로 행정지도 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, 금융회사 문제를 규제의 문제로 돌리는 행태도 있는 등 자율책임이 미흡

-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이 예정되자, 은행들은 비대면 확인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당국에 구체적 지침을 요청
-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화한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했으나, 금융기관들은 규제의 모호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
-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, 규제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

➔ 금융현장 수요자의 금융규제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

III.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방향

◆ 금융의 자율, 경쟁 촉진 : 자금중개 강화, 고부가가치·일자리 창출



1 금융규제의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

1. 금융규제 유형화

□ 금융법령·규정·세칙 등 명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, 모범 기준, 가이드라인,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를 대상

□ 규제목적에 기준으로 시장질서, 소비자보호, 건전성,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 → 유형 특성을 고려 규제개선 원칙 설정

- 시장질서·소비자보호 → 강화 또는 정교화
- 과도한 건전성 →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
- 영업행위 → 폐지 또는 완화

< 금융규제 유형화(안) >

유형	주요 사례
시장질서	▪ 지배구조(이사회 구성, 준법감시인 선임 등), 소유구조 (대주주 주식보유 제한, 금산분리 등), 내부자거래, 공시, 시세조종, 공개매수, 유사수신행위 등
소비자 보호	▪ 광고, 비교공시, 신용정보보호, 설명의무, 손해배상책임,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
건전성	▪ 자본적정성, 위험관리, 유동성관리, 자산건전성, 외환 건전성,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
영업행위	▪ 진입기준, 업무범위, 자산운용, 수수료, 업무위탁, 상품 개발 등

※ 추후 유형화 작업과정에서 보다 정교화해나갈 예정

2. 금융규제 합리화

□ Top-Down방식에 Bottom-Up방식을 접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

- (Top-Down) 국제수준, 금융회사 내부역량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합리화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하나하나를 점진·개선

< 규제합리화 기준(7개) >

- ①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개선하고 사후책임을 강화
- ②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
- ③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
- ④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- ⑤ 업권별·기능별로 규제수준을 맞추어 경쟁 촉진
- ⑥ 금융사고 등으로 일시적 강화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
- ⑦ 리스크 관리,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

- (Bottom-Up)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규제 지속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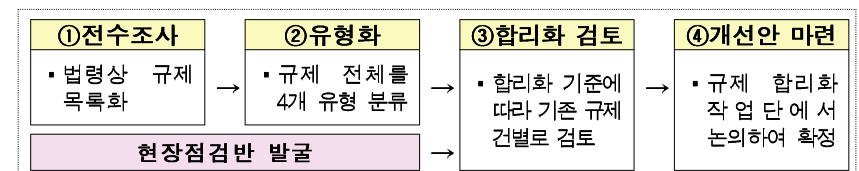
< 현장점검반 발굴 과제 >

◇ 현장점검반은 4.2.부터 6주동안 총 796건 접수, 390건 수용, 218건 추가검토중, 188건 불수용

- * 주요 수용과제 : 자산유동화증권 위험가중치 개선, 인수증권회사 수요예측 허용, 증권 신탁업자 대출업무 일부 허용
- * 추가검토중인 과제 : 금융지주그룹의 겸직제도 개선, 자회사 승인 기준 완화,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 규제 폐지·완화 등

➡ 금융규제의 전반적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(Level-Up)

< 규제합리화 프로세스 >



2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역파

1 법적 근거 없는 규제 일체 정비

- 감독규정, 세칙 등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하거나, 필요한 경우 상위법상 근거 마련

* 예: 「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」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위탁을 규제

※ 규정·세칙 정비 과정에서 금감원 고유업무는 세칙으로 이관하여 금융위·금감원 역할·책임 정립도 병행

2 현장점검반을 통한 적극적 유권해석(No Action Letter) 활성화

- 현장점검반을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을 포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, 법령 개정사항은 일괄 개정 추진
- '08년 이후 유권해석·비조치의견서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DB화한 후, 포털에 공개(매년 연차보고서 발간)

3 비공식적 행정지도* 관행 근절

*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권고·지시로 구두지도, 모범규준,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 → 소위 그림자 규제

- 규제와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 점검 및 개선 추진

- 인·허가 승인시 법규에 없는 절차운영 등 금융회사 애로사항
- 구두·공문 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를 통한 사전 개입
- 비공식 행정지도의 금융회사 내규 반영사항

- 금융당국의 등록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하고, 공지 시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가 아님을 천명

3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

1 금융규제 “옴부즈만 제도” 도입

- 금융당국 외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, 애로 등을 익명 신고·접수하여 시정·개선 권고
 -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*에 옴부즈만 추가 등 확대·개편
- * 현재 민간위원 7인, 정부위원 2인으로 구성

2 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

- 기존 규제 개정 시 일몰설정 의무화
- * 현재 「행정규제기본법」은 신설 규제만 일몰설정을 의무화

3 규제비용총량제*(Cost-In, Cost-Out) 도입 사전준비

* 규제 신설·강화 시 다른 규제 폐지·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이며, 현재 14개 부처(금융위 미포함) 시범사업 추진중

- 금융규제 비용·편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* 마련

*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중('15.5월~)

4 (가칭)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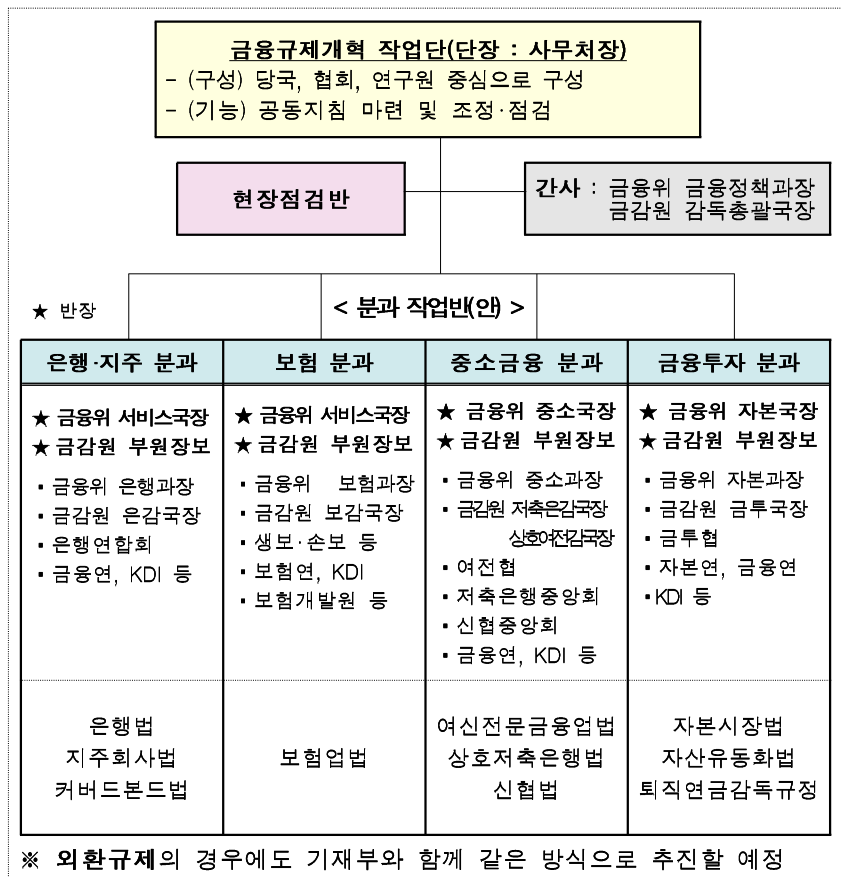
- 규제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위·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위반시 적절히 조치

- 규제 신설·강화 프로세스(의견청취, 규제비용분석 등)
- 규제합리화 기준(사전→사후, 네거티브 방식, 온라인 환경 부합 등)
- 비공식 행정지도 원천적 폐지(무효, 제재불가 원칙)
- 금융당국 가격·수수료,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개입 통제
- 근거 없는 또는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·자료 제출 제한
- 금융규제정비의 달(매년 9월) 운영
- 옴부즈만 제도 신설·운영 등

IV. 추진체계 · 일정

1 추진체계

- ①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: 공동지침 마련 및 조정·점검
- ② 분과 작업반(4개 분과) :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마련
- ③ 현장점검반(3개반) : 금융현장 규제개선 사항 발굴



2 추진 일정 : 연내 마무리 목표로 과제별로 속도감있게 추진

- 연내 마무리 일정으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
 - 유형별·합리화 기준 등에 따라 검토 완료된 과제는 즉시 확정, 여타 과제들도 빠르게 추진
- 시행령·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은 방안 확정과 동시에 후속 조치 추진(연내 제·개정 목표)
 - 법률개정 사항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 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제출

추진과제	작업방식	추진일정	담당
① 금융규제의 유형화 및 합리적 개선			
· 금융규제 전수조사·유형화 · 금융규제 해외사례 등 조사 · 금융규제 개선안 마련	· 분과 작업반 자체 운영	~ 6월 중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발표	분과 작업반
②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혁파			
· 상위법 근거없는 규제 정비	· 금융위 금감원·협회에서 규정·세칙 등 점검	~ 8월 말	금융위 규제법무, 금감원 법무실, 금융유관기관
· 적극적 유권해석(No Action Letter) 활성화	· '08년 이후 유권해석·비조치 의견서 유효성 검토 후 공개 · 현장점검반 과제 발굴	DB구축 (~ 8월) / 지속	금융위 규제법무, 금감원 법무실, 현장점검반
·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	· 외부기관에 실태점검 의뢰 · 금융회사내규 반영 점검	~ 9월 (매년)	금융위 금정과, 금감원 감총팀
③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			
·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	-	~ 9월 말	금융위 규제법무 금감원 감총팀
· 개정 규제 일몰설정 의무화	-	즉시	금융위 규제법무, 금감원 법무실
·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준비	·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(5월~)	~ 12월 말	금융위 규제법무 금감원 법무실
·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	-	~ 12월 말	금융위 금정과, 금융위 규제법무 금감원 감총팀